



# 경수로 건설 지원의 비용과 효과

김창권 / 전주대 무역학과 교수

북한에 경수로 건설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도출될 수 없다. 이른바 경수로 건설 지원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에는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수로 건설 지원은 유형적인 편익비용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수로 지원은 일차적으로 사적 재화로 시장메카니즘에서 가치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공공재의 성질을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될 수 없는 사회적 편익비용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후자의 경우에 정치경제학적 결정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결정과정이 그 사회 구성원에게 적합한가(adequacy), 경제적인가(economy), 공평한가(equity)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welfare)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향간의 보도에 의하면 경수로 건설 지원의

대의(人義)가 '남북한의 점진적·단계적 통일'에 모아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 경수로 건설에서 수반되는 사적 비용의 의미는 축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적 비용의 의미만 확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수로 건설에 따른 금전적 비용의 크고 작음은 문제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한국형 경수로가 선정되는가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로 인한 '흡수통일'을 염려하기 때문이라 한다면, 한국형 명기(明記)의 경수로 공급은 통일을 위한 점진적 접근방법이 아닌 충격 요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경수로 건설 지원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먼저 낱낱히 검토하고 경제성과 경제원칙을 고려하여 - 여타의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듯이 - 경수로 건설 지원에 임하는 것이 나을 뻔도 했었다.

그러나 여하튼 경수로 공급이 점진적 통일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

용편익분석은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수로 공급 협상에 있어서의 정부의 협상능력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동서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은 한반도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그러기에 대립으로 인한 긴장이 완화될 것을 고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데, 지리한 장마비가 계속 내리듯이 늘상 남북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타결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호기를 놓치는 것이 될 것이다.

### 대두되고 있는 경수로 유형론

경수로 건설 지원의 손익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나 우선적으로는 경수로 유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북미 핵회담 이후 경수로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경수로 선정에 대한 이해관계의 마찰때문이다. 관련국들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자국의 이익을 -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도 -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유상지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 경수로만 채택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북한에의 투자란 현재 당장 이익을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기에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진출은 - 보통의 다국적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 선점효과와 미래의 수익을 내다 보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른 것같

다. 왜냐하면 북한에의 경수로 건설 지원은 일종의 민족 내부자 거래이고 따라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남북한의 공통의 과제 - 통일 - 를 준비하는 일환으로써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두될 수 있는 경수로 프로젝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이라고 명기되었든 되지 않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한국형 경수로가 선정되는 경우다. 이에선 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그 하나는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공급계약을 체결하되 그 형식적 대표권만 미국이 소유하고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한전이 주간사로 하여 국내외 업체에 분야별로 건설에 참여케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서 한국은 가장 많은 경제적 과실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및 일본 등에서의 반대로 그 가능성이 미약하다.

또 하나는 관련국가들이 공동출자하는 합작투자법을 설립, 각국의 출자비율에 따라 하청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상의 합작투자자와 상통하는 맥락을 갖고 있어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뚜렷한 원칙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는 한국형 경수로란 명기는 사라질 것이기에 북한의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나, 여전히 한국이 최대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KEDO와 북한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며 한국의 이익은 우리의 기대했던 것보다 작을 것이다.

둘째는 북미 핵회담 및 KEDO의 대표격인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챙길 속셈으로 자국 기업을 통해 경수로를 공급하는 경우다. 미국도 일정 비율의 재정분담을 지급한다면, 순수하게 우리나라로 하여금 주도권을 갖고 경수로를 제공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한국형을 반대하는 북한의 주장과도 맞아 떨어져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에 있어서 미국이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설계, 제작, 시공, 감리 등을 총괄리하되 한국에게는 제작 및 시공 등의 일부에서만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북한은 미국 경수로 모델 즉 한국 표준형 경수로의 모체인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SYSTEM-80모형을 받아들이며 공급주계약자로 한·미·일 3국 컨소시엄과 체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우선적으로 재원 조달상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든지간에 한국형 경수로는 관철되지 않

는다면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부담하기에는 미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테러국가로 규정되어 있어 적성국교역법 등으로 북한에의 자금 지원에는 제약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세째는 북한의 계산이 최대로 반영된 러시아형 경수로의 도입이다. 러시아가 한국에 빌려 쓴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러시아형 경

“  
**북미 핵회담 이후 경수로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경수로 선정에 대한 이해관계의 마찰때문이다. 관련국들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자국의 이익을 —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도 —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유상지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 경수로만 채택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

수로를 현물로 지급하고 이를 북한이 핵협정에 따라 수용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침체된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대북한 경수로 제공에 여전히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

한 러시아의 외무차관 파노프는 러시아형 경수로 공급만이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용은 20억 달러에 불과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북·러간 원자력 발전시설 건설협정을 맺었었으며, 이 일환으로 시설 및 장소 선정, 타당성 조사, 기술과 운영 등에 관한 사전 준비 작업도 시행한 바 있고 북한은 게다가 러시아의 핵 기술과 이용에 관한 훈련을 받

았으며 상호 기술진 교류도 있었다는 기득권 원칙을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란 진출 포기의 반대급부로 미국과 러시아형 경수로 관철을 위한 협상중에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러시아형 경수로가 지원될 경우 미국을 제외한 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하며 기본 설비와 기술은 러시아가 제공되고 컴퓨터 부품 등 부대 설비는 한·미·일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러시아형 경수로는 핀란드에서도 사용되고 있으

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KEDO의 중심국인 한·미·일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마지막으로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불쑥 튀어 나온 것으로 독일형 경수로 컨보이(convoy)나

기타의 캐나다형 경수호가 있다고 하나 그 논의는 필요가 없을 듯하다.

### 한국형 경수호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은

경수로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면 어느 형태의 경수로 프로젝트가 가장 현실성이 높겠는가? 첫째의 두번째안이 채택될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경제』 1995년 3월호 “통일경제노트”

참조). 즉 ‘한국형’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퇴색하여 북한의 입장을 살려주되 그리고 미국 등 서방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하되 실질적 주도권은 우리나라가 취하는 형태다.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남한측이 제공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비유한다. 그들은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에 도입될 때 겪을 북한사회의 과급효과를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경수로의 절대불가를 선언하고 있다. 경수로

“

북한은 지난 여러차례의 북미협상과정에서 경수로 공급자로 한국을 명시하는 데 동의할 수 없으며,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아직 전쟁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자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협상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북한 특유의 외교전략이지만 지난 10월 북미 핵회담의 타결에서 보았듯이 중국에는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은 지난 여러차례의 북미협상과정에서 경수로 공급자로 한국을 명시하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아직 전쟁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자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협상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북한 특유의 외교전략이지만 지난 10월 북미 핵회담의 타결에서 보았듯이 중국에는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지

지원과정에서 기술 인력의 교류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뿐더러 한국 기술의 북한 이전은 그들의 주체사상과도 상충하는 것이다. 한국형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지만 하면 이것은 곧 북한사회의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

원의 현실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측면에서 한국형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취약한 전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전력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으면 실제로 공사가 완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며 200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라는 것은 사실상 북핵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항간에 그것이 한국형 경수를 염두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의 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경수를 완성해야 한다면, 한국의 기술인력이 북한에 투입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 완전한 한국형 경수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렇지만 북한의 거부감으로 설사 우리 정부가 한국형 명기를 포기한다 할 지라도 우리가 지원해야 할 재정지분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협상에 응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한국형 경수로가 될 공산이 크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어느 정도 지분을 미국에 넘겨줘야 할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도 한국형 경수로가 선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 경수로 건설 지원 비용 부담 및 각국간 분담 원칙

지금까지 경수로 지원에 따른 총 재정적 규모와 조달방법 등에 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

장 발표는 없는 상태이다. 다만 언론에서 북핵 회담 타결 이후 한국형 경수로를 가정, 북측에 지원될 모형과 동형인 현재 건설중인 울진 3, 4호기의 비용 등을 통해 약 40억 달러(3조 2천억원, 1천MW급 경수로 2기 공급)라는 것만이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북핵회담 타결 이후 미국 페리 국방장관이 의회청문회에서 북경수로 지원에는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증언한 바도 있으며 경수로 건설과정에 북한에 제공되는 대체에너지인 중유도 지난 12월 미국이 1차분을 선적하여 보냈지만 향후 계속되는 중유지원 약속에 대한 재정분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40억 달러의 경수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가정하자.

경수로 비용에 대한 각국간의 분담원칙을 책정하는데도 서두에서 언급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수익자 부담 원칙).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경수로의 노형이 결정되어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지난 3월 6일에 구성된 KEDO에서 결정되기에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상 KEDO 구성국가간 모두 비용분담을 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한국이 주로 50~75%,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중심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진행하는 미국을 제외한 기타 여러 국가가 극히 일부를 부담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측은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내 사정 등을 들어 450만톤 가량의 중유공급에 드는 비용(5억 달러 정도)을 부담하는 대신 경수

로 지원 비용은 한국 및 일본이 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북미 핵협상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게 몰리고 있어 한국형 경수로로 관철하고 경수로 건설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하다. 즉 한국형으로 명기되든 안되든 실질적으로 한국형 경수로가 공급될 것이라면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 국가간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재정분담의 원칙과는 관계없이 - 총재정적 지원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40억 달러의 비용 추계는 남한에서의 비용이고 북한에 건설할 경우 토지 매입비, 건설자재 및 인력, 건설공기의 단축 등으로 약 20% 정도의 건설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총 공사비는 약 2조 5천억원이 소요되고 한국의 부담을 70%선이라고 할 때 한국의 총 재정적 부담은 1조 8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경수로가 완성될 2003년까지 8~9년 동안 공정단계별로 분할할 것을 가정하면 매년 분담비용은 평균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 정부의 경수로 건설 비용 지원 방안

정부는 북한 경수로를 지원할 때 현금을 제공하지 않고 자재부품, 인력 공급 등 현물과 서비스로만 할 계획도 갖고 있는 듯하다. 즉 IBRD와 IMF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정부보조의 차관으로 북한에의 지원형태는 유상으로

하되 북한의 현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부분은 원자재 수입권, 자원개발권 등 현물로 받고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보전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기료 인상을 통한 자금 조달은 준조세와 같아 국민적 부담이 크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한전이 증자나 해외 기채를 통해 할 수 있으나 한전이 뉴욕증시에 상장한다면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이 적다.

### 한국형 경수로 건설 지원에 따른 회계상의 손익계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국형 경수로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연지사다. 왜냐하면 한국형 경수로만이 자체 설계능력이 있고 이에 따라 경수로 건설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을 선택할 경우 기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형 경수로는 이미 한국실정에 맞게 개량한 것이므로 기술적인 면에서 북한에 한국형 경수호가 아닌 다른 경수로를 건설할 경우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 전체 건설비의 10%를 차지하는 설계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10%의 비용이 절감되며 설계기간을 또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리비용 부담도 절감할 수가 있다.

한국형 경수로의 보다 정확한 손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한국형 경수로의 기술자립도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한다. 정부와 원자력 연구소 그리고 한국중공업측은 대략 95%선(95년도 목표수준)의 기술자립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3년말 현재 종합사업관리능력 97.7%, 플랜트 종합설계 92.5%, 원자로 계통설계 92.2%, 핵연료 설계 93.9%, 원자로 설비제작 84.4%, 터빈 발전기 제작 98.0%, 핵연료 제작 92.8%, 발전소 시공 99.4% 등). 그러나 기술자립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측정해야 하는가? 경수로 건설에 투입되는 부품의 갯수나 부피 또는 투여 인력의 비율 등에 의해 기술자립도를 판단한다면

계량화하는데 있어서는 쉬우나 그 부품의 중요도 또는 질적 요인을 간과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

의 외국기술이 원전건설의 핵심기술을 의미한다면 나머지 95%를 국내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과소평가 해야 될 것이다.

또한 가격대비에 있어서 국산화 정도는 낮은 것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즉 기술자립도만큼 우리에게 부가가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요구되는 부품이나 외국 자문료 등이 해외로 송출되며, 수주받는 국내기업들에도 외국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납품하는 사례까지 고려할 경우 20% 이상이 외국에 돌아갈 몫이라고 한다. 실

제로 한국 표준형 경수로 제작의 모회사인 ABB-CE는 우리의 설계 기술자문역을 맡고 있는 바, 신기술의 도입이나 안전성 등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들의 기술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자립도가 95%, 그리고 가격대비 국산화의 비율이 가정하여 기껏해야 80%, 거기다 정치적인 협상력에 의해 좌우되는 하청 결정에 있어서의 지분율이 50% 이하라면 — 최근 미국은 북한의 거부 공세를 빌미로 경수로 사업에서 자국회사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작전을 짜고 있는 듯하다 — 반면 우리의 경수로

“ 경수로는 일종의 국방재로써 막대한 비용이 이에 투입된다고 할 지라도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추방되고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이미 그 역할은 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정부담율이 70%라고 한다면, 회계장부상으로는 우리가 100을 지불했을 때 최악의 경우 40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 경수호가 선정될 경우 독자 개발한 원전기술이 최초로 수출하는 계기도 마련하며 국제적으로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필리핀,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에 원전기술의 수출을 모색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국 표준형 경수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수로 건설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조성해주는 것이고 기술적인 자급 체제의 강화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수입구조에서 수출로 바뀌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 한국형 경수로 선정의 정치경제학적 효과

대북경수로 지원으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수로 지원 건설에 따른 손익계산은 경수로 건설이라는 회계상의 단순한 한 항목에서만 계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계량화할 수 있는 경제·기술적 이익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 예를 들면 국민적 자부심을 망라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경수로 지원이 남북 통일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며, 따라서 통일 이후까지의 경수로 건설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수로 보급으로 인한 안보이익과 장기적인 통일소요비용의 감축효과를 감안한다면, 어렵잡아서 위에서 최악의 경우에서의 손실인 60을 상회하는 결실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경수로는 일종의 국방재로써 막대한 비용이 이에 투입된다고 할 지라도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추방되고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이미 그 역할은 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형 경수호가 북한에 세워질 경우 이는 정치군사적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 수 있다. 한국형 경수호가 북

한에 공급된다면 남북간 원자력 협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직전에 북한과 원자력 협정을 맺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핵물질 시설의 군사적 이용 방지, 안전규제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 핵기술의 제3국 수출통제, 원자력 전문가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

한반도에서의 정치적인 안정에서 파생되는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8년여의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원전건설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기술 등이 교류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개방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남북교역의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 11월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실제로 남북간 인력교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최소한 전문기술진 2천여명에서 최대로 건설인력 5천명선의 인력교류의 효과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경협 및 통일의 숨통을 열어 놓을 수 있는 호기인 것이다. 또한 북미 핵회담의 합의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수로 건설이 시작된다면 남북간에는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대화의 재개는 통일과 특히

단 계	경수로 건설 지원	남북관계 중장기 전략안
1단계	경수로 공급 계약 체결까지	남북대화 재개 중점 추진
2단계	1996년초 경수로 공사 착수	공동위 및 정상회담 개최
3단계	향후 3~5년 핵심부품 인도	상시대화 및 경협 전면 개방
4단계	2000년경 경수로 1기 완성	남북연합 진입단계 구축
5단계	2003년 경수로 2기 완성	남북연합 정착 통일 기틀 마련

자료: 1994년 11월 20일자 「동아일보」 1면.



남북경협이 활성화의 필수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수로 건설과 연결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인적교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외적으로 경제적인 개방은 추구하지만 대내적인 통치에 있어서 폐쇄성은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 인적교류는 방해하려고 할 것이기에 향후 한국형 경수로는 선정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난항이 예고된다 (그래서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서의 원전 건설을 주장하지만 이 지역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 또한 기술자의 최고 책임자는 미국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나 한국인 기술자가 전체의 35%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 그 한 예다. 반면 공노명 외무장관은 경수로 특구를 제외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물론 경수로 지원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에 관해 피력하는 논자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헨리 소콜스키(핵확산금지정책 교육연구소 소장)는 대북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통일의 시급성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늦출 수 있는 역기능이 상존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원전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사항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 지원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핵의혹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세우는 것과는 별도로 끊임없이 IAEA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북한의 핵투명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남북경협을 대비하되, 대북 경수로 지원은 합리적으로 경제성에 따라

우리나라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형 경수로를 공급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남북한 교류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장차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남북한간에 기술인력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일 뮌헨대 경제학과 한스 베르너 진 교수는 독일통일을 마치 추운 겨울에 꽂꽂 얼어 있던 자동차를 급작스럽게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 것(Kaltstart)으로 비유하였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성공적인 경수로 지원은 남북통일을 위한 보다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 마치 겨울날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동을 걸어놓는 것(Warmstart)처럼 — 통일에 대한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이지 한국형 경수로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적어도 KEDO에 참여하는 지분만큼은 이 경수로 건설지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챙겨야 하고 덧붙여 남북한간의 특수 사정 - 통일과정 - 에서 기인되는 이른바 프러스 알파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경수로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큼 지분에 관여해야 할 것이다. 비용편익간의 불균형이 심한데도 한국이 경수로 건설지원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간의 프로젝트가 구성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환언하면 현재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우선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추진이라고 한다면 이 원칙이 경수로 지원 건설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철저한 경제 원리에 비추어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서 각국간에 비용을 분담하고 부담된 지원액의 비중에 따라 목소리를 내세워도 된다는 것이다. 사안에 대해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적합성과 경제성, 공평성을 살펴보고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복지를 늘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북한에 경수로를 세우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경제적 손익평가는 사실상 무리이다. 다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또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서도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에 주도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단시일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하여 이른바 흡수통일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염두에 둔다면, 즉 점진적·

“

북한에 경수로를 세우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경제적 손익평가는 사실상 무리이다. 다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또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서도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에 주도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원칙이 경수로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실상 언론에서 너무 '한국형 경수로'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협상에서 어려워진 듯한 느낌도 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10월 북미 핵회담의 타결 이후 언론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크로즈업 시킨 것은 잘못이다 (남북경협의 다른 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KEDO와 북한과의 경수로 공급 체결과정에 있어서 한국형이라는 것을 설명 명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수로 건설의 주도권을 쉽게 그리고 조용하게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한 만큼 재정적 부담을 지더라도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을 것이다. ☞